

Methyl Bromide 금지시한 연장 요구

FT, 일부 선진국에서 농민-정부 논란 지속 ... 프라하 회의 결과 주목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이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금지된 화학농약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FT(Financial Times) 인터넷판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 농민들이 메틸브로마이드를 대체할 농약이 너무 비싸고 효과도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진 17개국 정부가 메틸브로마이드 금지시한을 2006년 이후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조인한 국가들은 지구 오존층 보존을 위해 선진국들의 프레온가스(CFC) 사용 등을 금지한 내용을 다시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금주 체코 프라하에서 회의를 연다.

프라하 회의에서는 강력한 훈증살충제이며 오존층 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의 단계적 사용제한 조치가 선진국에서 2004년 말로 완료되고 2005년부터 완전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현재 필수 농산물과 가축사료용 작물, 가축 등에 대한 해충방제용으로만 메틸브로마이드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선진국들은 2005년부터, 개발도상국들은 2015년까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 미국 상원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철폐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미국이 작은 이익을 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를 철회하면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의정서를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기업 등의 투자도 무위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라우스 퇴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도 규제조치 연기에는 절대 반대한다며 현재 오존층 복구 노력이 한참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UN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1세기 중반에는 오존층이 복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4년 10월 뉴질랜드 과학자들은 오존층에 뚫린 구멍 면적이 2003년보다 20% 감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화학저널 2004/11/25>